

尹 신병 확보, 김건희·해병특검도 가속도 붙는다

공천 개입·VIP 격노 의혹 핵심 수사 대상이자 '몸통'
압수수색영장에 업무방해·정자법 위반 등 혐의 적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에 따라 김건희특검, 해병특검 수사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 특검도 부담을 안고 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수사 절차가 신속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모두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수사내용이다.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필수라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개입 의혹에서 명태균씨 등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관계성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영장을 토대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병특검 역시 'VIP 격노설'의 직접 당사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어 해병특검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봐야하는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지휘부 등에서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와 개입 여부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추궁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 외압이나 사건 은폐가 이뤄졌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첫 강제수사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에는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특검은 향후 조태웅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회의의 다른 참석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힌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 '尹 공범' 지목 한덕수 영장청구 하나

특검, 비상계엄 사후 공범 지목
이상민·박성제도 수사선상에
김성훈·이광우 형사 처분될 듯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됨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상계엄 사후 부처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강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 되는 등 내

란 수사가 본격화하자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앴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강 전 실장뿐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간 한 전 총리는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제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계엄 직후에는 절차적 흠결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

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보긴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위증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볼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그동안 관련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해온 이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의 형사 처분도 머지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외신 “尹, 장기 구금 가능성 열리게 돼”

재구속 긴급 뉴스로 신속 보도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 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구속된 사실을 업데이트 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팩트 위주로 신속 전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